

#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백 일 권 의원)

의안 번호	51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9.

발 의 자: 백일권 · 정영수 · 김한태 ·  
이금태 의원

## 1. 제정이유

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각종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 
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(안 제4조)
- 다. 안심귀갓길 조성(안 제5조)
- 라. 안심귀가보안관 운영(안 제6조)
- 마. 실태조사, 협력체계 구축, 포상(안 제7조~제9조)

## 3. 제정 조례안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25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9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
나. 예산조치: 집행기관 협의

##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각종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안심귀갓길”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(이하 “주민”이라 한다)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.
2. “안심귀가보안관”이란 아동, 청소년, 여성, 노인 등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이 동행을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안전시설물”이란 관계 법령과 설치 기준·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활안전 CCTV, 보안등, 비상벨,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.
4. “스마트안심귀가시스템”이란 통합관제시스템을 바탕으로 생활안전 CCTV,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인지·예측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관리 계획에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 추진)** ① 구청장은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
2. 안심귀가보안관의 운영
3. 스마트안심귀가시스템의 구축
4. 생활 호신술 훈련 등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

5. 그 밖에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(CPTED),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5조(안심귀갓길 조성)** 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CCTV 등 생활안전 촬영 장비
  2. 비상벨 등 경보 장치
  3. 보안등, 가로등, 영상 투사기(로고젝터) 등 조명 시설
  4. 안심귀갓길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안전 표지
  5. 무인 택배 보관함
  6. 그 밖에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사건·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
  2. 재개발·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
  3.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
  4. 아동·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
  5. 아동, 청소년, 여성, 노인 관련 단체 및 주민 단체 등에서 제안한 지역
  6. 그 밖에 안전시설물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
- ③ 제2항에 따른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 실사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안심귀가보안관 운영)**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심귀가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도보 순찰을 통한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 집중 관리
  2. 도로 파손, 보안등 고장 등의 안전 위해 요소 모니터링
  3.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지원
  4. 그 밖에 주민의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각종 생활안전 대응
- ② 구청장은 안심귀가보안관 선발 시 대상자의 범죄 이력, 동행 역량, 지역 사정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안심귀가보안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

실시하여야 한다.

- ④ 자율방범대 등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활동하는 주민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안심귀가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심귀가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실태조사)** 구청장은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실태,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부경찰서, 서부교육청, 자율방범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9조(포상)** 구청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 법령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5조(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·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·군·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·군·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29조(시·도안전관리계획 및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) ①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시·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·군·구

안전관리계획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
2.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
3.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